



고령화시대 노인정책의 방향

김현주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아이를 덜 낳고 사람들이 오래 사니 인구의 고령화는 필연이다. 합계출산율은 벌써 15년째 최저출산 수준이라는 1.3 밑에서 올라올 줄 모른다. 1970년 62세이던 평균수명은 45년 뒤 82세로 20세가 늘었다. 그러다 보니 총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나 노인인구는 금년 686만 명에서 2030년에는 두 배로, 2050년에는 세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흔히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에서 예를 찾기 어려운 빠른 속도다.

“장수”는 인류의 오랜 꿈이었지만 이제는 회갑, 칠순은 물론 팔순을 넘어 아흔을 바라보는 어르신

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 개인에게 장수가 축복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6%로, 2014년 OECD 평균인 12.6%의 4배에 가깝다. 노인 자살률은 2014년 10만 명당 55명으로, 전체 연령 자살률 27.3명의 2배에 이른다. 기대수명이 81.4세인데 건강수명이 73세이니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 8년 이상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는 셈이다. 노인 중 약 10%인 68만 6000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이들 지표 하나하나가 보여 주는 것은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 수가 늘어나는 만큼 노인의 행복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정책을 펴는 목적은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

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노인 삶의 여러 측면, 즉 소득, 일, 여가, 건강, 돌봄,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헤아리고 이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 '삶의 질 보장' 분과를 두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고, 그 결과를 지난해 말 확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았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본다.

우선 노인의 소득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국민연금인 만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인 1국민연금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전업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의 국민연금 수급을 확대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 확대 등 여성 연금의 수급권을 강화하여 2015년 370만 명 수준인 수급자를 2020년 489만 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 가구의 부동산 자산 유동화를 돕는 유용한 수단인 주택·농지연금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입 조건, 가격 한도 등과 관련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국민연금, 퇴직·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에 이르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둘째, 노인의 '일' 관련 정책이다. 고령사회 대책에서 노인의 근로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삶의 질 측면에서 볼 때 노인은 일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건강의 증진을 경험한다. 한편, 국민경제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가 야기하는 가장 큰 위협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의 증가에 있는바, 노인의 적극적인 근로 참여는 부족한 생산인구를 확충하고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핵심 방안이 된다. 기본계획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60세 정년제의 안착,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령자 친화형 작업 환경 개선, 취업·창업에 대한 지원, 연간 5만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확충 및 노인 자원봉사클럽 육성 등 노인의 근로·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노후를 활기차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과 틀니·임플란트 등 노인의 수요가 큰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관리,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국가 치매 대책 추진 등을 통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를 2014년 8.4세에서 7.5세로 낮추는 비전을 천명하였다. 또한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 고령자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노인보호구역 확대하고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노인 안전대책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일명 '브릿지 플랜 2020'으로 불린다. 기본계획 5개년간 낮은 출산율, 높은 노인빈곤을 극복하는 교두보를 마련하여 2030년

이후 안정적인 출산율을 바탕으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와 어르신들이 당연한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구현한다는 취지이다. 앞서 소개한 여러 노인정책 역시 2020년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방향이요 과제라 하겠다. 보건복지부는 물론 관련되는 모든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여러 부문이 서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의 노인정책 방향을 모색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 측면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우선, 노인정책을 수립할 때 현 상황을 기반으로 삼는 것 못지않게 인구와 고용·산업구조 등의 단기 및 장기적 변화를 항상 주시하고 예측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빈곤 실태, 취업구조, 의료비, 돌봄 수요 등에만 의존하여 정책을 만들어 가기에는, 우리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인구 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관련 정책의 변화가 너무 역동적이다.

국민연금에 성숙해 감에 따라 노인빈곤의 실태가 어찌 변할지, “내 나이가 어때서”를 외치는 연부역강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되어 가면서 노인 일자리의 구도는 어떻게 바뀔지, 최악의 취업난을 겪는 작금의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인구 오너스(onus) 시대로 넘어감에 따라 노인 근로에 대한 수요는 얼마나 늘어날지, 노인 세대가 지배적인 구매력 원천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른바 ‘고령친화산업’ 및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지 등등... 인구 추계에서 맴도는 좁은 의미의 인구학을 넘어 다학제적이고 동태적인 인구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을 더 알아야겠다. 어떤 정책이든 정교한 입안을 위해서는 관찰과 연구를 통한 수요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수요자가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도 상당 기간 노인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노인에 대한 지출 역시 증가해 갈 것임을 생각하면 정책 수요를 정확히 짚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효율적인 행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것이 노인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된 소득, 일, 여가, 건강, 돌봄 및 안전 등으로 대별되는 노인정책이 소득 수준, 지역, 질환 여부, 가족 구성 및 개인 선호 등 개별화된 노인의 정책수요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계속 반추하고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다못해 노인의 ‘연령’에 따른 특징과 정책 수요라도 파악할 수 있다면 매우 유용한 정책 원천이 되겠지만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기왕의 연구 성과들은 노인을 그냥 60세 또는 65세를 넘어선 사람들로 범주적으로 뭉뚱그려 보는 게 일반적이어서 이를테면 80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 등은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역량 있는 연구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 본다. ■